

2014년 "양회" : 안정성장 속 개혁 심화

中 정부는 2014년 정부공작보고에서 GDP 성장을 목표치를 7.5%로 제시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적극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개혁(改革)"이 77차례나 언급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개혁 강조
- 2014년 중점 과제는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정책 내용이 구체화·세분화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양로보험 도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더욱 강조

2014년 양회 9대 중점업무

	중점 업무	주요 내용	정책 연속성
개혁	개혁 심화	- 투자 심의제도 개혁 - 재정 세수 개혁 - 금융체제 개혁 - 소유제 경영 강화	◎
	농업 현대화 및 개혁	- 농업은 내수구조조정 중의 중요 영역임을 강조 -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 향상 - 농촌의 수력·통신 등 인프라 설비 개선	◎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 과학시스템 개혁, 과학기술인들의 창업 지원 - 신흥산업 발전 및 과잉생산 억제	◎
내수 강화	내수경제 강화	- 소비촉진 정책 마련, IT 소비 추진 - 투자 주체의 다원화 - 보장성주택, 농업, 수리사업 투자 확대	◎
	신형 도시화 추진	- 도-농간 일체화 시스템 마련, 호적 제도 개혁	◎
민생 안정	민생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정책 추진 - 소득분배구조 개선, 저소득층 소득 향상 - 도-농간의 단일화된 양로보험 구축 - 보장성 주택 700만 채 신규착공	◎
환경 보호	교육, 위생, 문화산업 발전	- (교육) : 중서부 및 농촌지역 교육 투자 확대 - (의료) : 도-농간 의료보험제도 통합	◎
	생태, 문화, 환경보호	-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실시	◎
대외 개방	대외개방 수준 제고	- 서비스업 개방 - 통관제도 간소화 - 다국적 전자상거래 시범 지역 확대 - 상해 자유무역지구 시범구역 관리 강화	●

주 : 2013년보다 정책이 강조된 업무는 ◎, 2014년 새롭게 강조한 업무는 ●
자료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Shanxi Securities Co., LTD,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본격적인 개혁 추진으로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

- (개혁 심화) 본격적인 개혁과 리스크 관리 강화는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내수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금융 개혁) 예금금리 자유화를 2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시장화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내수 확대) 올해 소매판매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14.5%(YoY)로 설정함에 따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내수 성장방식 전환을 가속화
- (민생개선 및 환경 보호) 고용안정을 통한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 (대외 개방) 서비스 산업의 집중적인 개방과 함께 상해 무역지구의 서비스 개방 분야도 확대

성장전략을 동반하는 개혁 추진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소비활성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민간 및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질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
-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개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유동성 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개혁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의 파산 증가, 정책과정에서의 한계 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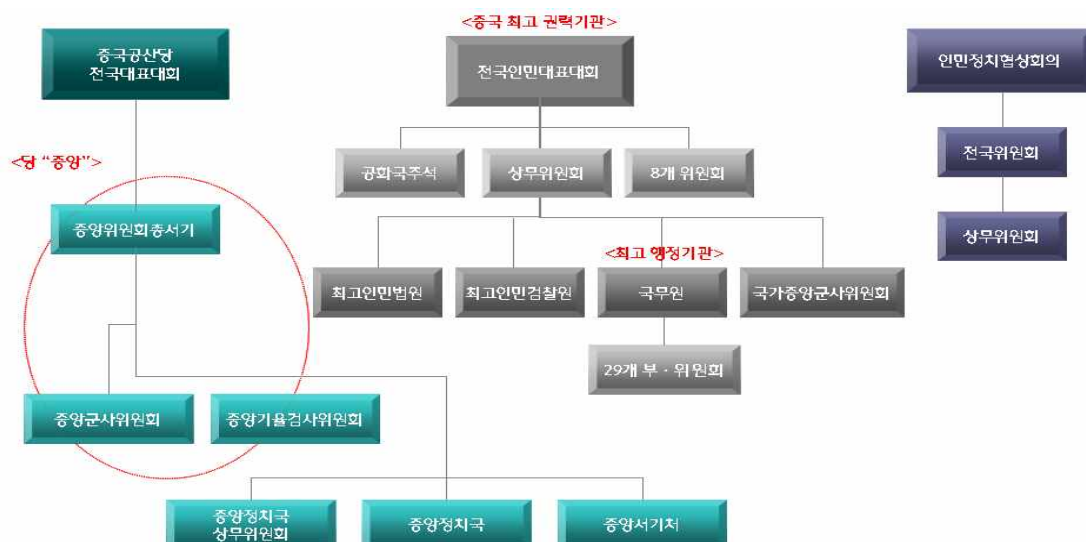
2014년 양회 정책 평가

주요 정책	평가 내용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구조조정 확대 등은 단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약화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예금금리 자유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내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자녀” 정책 완화를 통한 육아용품,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소비 시장의 확대 - 신형도시화, 농민공의 소득 개선, 호적제도 개선 등을 통한 소비 창출효과 기대
민생 개선 및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및 확장 재정정책 지속으로 생활 환경 개선 - 스모그 퇴치,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적 성장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
대외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의 개방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대 - 상해무역지구의 활성화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 증대

I. 2014년 양회(两会) 개요

-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리스크 우려 확산 등으로 2014년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및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시진핑-리커창의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¹⁾와 전국인민대표대회²⁾가 3월 3일과 5일 각각 개최
 - 정협과 전인대를 통상 양회(两会)로 지칭하며, 양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
 - 중국의 장단기 리스크 부각 및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상실 등으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당국의 경제상황 판단과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 과거 수출과 투자 중심의 고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장단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 과제에 직면
 - 특히 단기적으로 과잉유동성과 과잉생산 등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
 - 신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저성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의 성장 목표 설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신정부는 지난해 저성장 용인, 디레버리징, 개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리커노믹스" 정책을 추진

그림1 | 중국 국가권력 구조



주 : 2013년 기준
 자료 : 中国共产党新闻网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 중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정책 건의, 법률 및 정책집행 관련한 감독관리, 당파와 민족간의 화합 도모 등의 역할 (2014.3.3~12)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 중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한국 국회에 해당. 입법권, 임면권, 예산 심의 및 비준, 경제발전 계획 심의 및 비준 등의 권한 행사 (2014.3.5~13)

II. 2014년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1. 경제성장 목표 및 정책 방향

- 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7.5%로 제시
 - 3월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4년 정부 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를 발표하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설정
 - 2004년 이후 7년 연속 8.0%의 목표치를 유지(保八)하였으나, 2012년부터 7.5%로 하향 조정
 - 당초 中 당국의 개혁 의지를 감안할 때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입장을 유지
 -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중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인
 - 특히 2020년 소강(小康: 중산층)사회 실현 및 시장신뢰 제고, 성장구조 전환, 고용의 안정적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
 - 2013년 말 리커창 총리는 실업 확대 등의 사회 불안 방지를 위한 최저성장률을 7.2%로 언급
 - 시진핑 정권은 올해를 전면적인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안정적인 성장을 전제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표1 | 2014년 정부공작보고 경제성장 목표치

주요 경제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	실질	목표	실질	목표
GDP(YoY,%)	7.5	7.8	7.5	7.7	7.5
고정자산투자(YoY,%)	16.0	20.6	18.0	19.6	17.5
소매판매(YoY,%)	14.0	14.3	14.5	13.1	14.5
수출입(YoY,%)	10.0	6.2	8.0	7.6	7.5
CPI(YoY,%)	4.0	2.6	3.5	2.6	3.5
재정적자(십억 위안)	800	850	1,200	1,061	1,350
GDP대비 재정적자(%)	1.5	1.6	2.0	1.8	2.1
M2(YoY,%)	14.0	13.8	13.0	13.6	13.0
도시신규취업인구(백만 명)	9.0	12.7	9.0	13.1	10.0
보장성주택(신규착공, 백만 채)	7.0	7.8	6.3	6.6	7.0
보장성주택(재건축, 백만 채)	5.0	6.0	4.7	5.4	4.8

자료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Shanxi Securities Co., LTD 자료 재인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불안 요인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로 설정

- 물가 상승률은 식품 가격 변동 및 계절 영향 등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전반적인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3.5% 내외에서 통제
 - 정책 당국은 2014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 농업생산 증가, 제조업 과잉설비, 곡물 비축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다만, 2014년 자원 가격 및 수도·전기 가격 개혁,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을 강조

■ 3대 정책 목표로 개혁 심화,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 민생 보장 등을 강조

- 올해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 및 과잉생산 억제, 국유기업 개혁, 성장방식 전환, 금융 시장 개혁 등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
-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 1.2조 위안에서 1.35조 위안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积极的财政政策) 실시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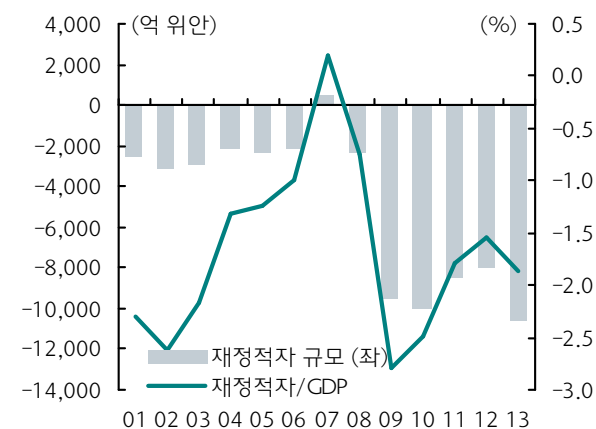
표2 | 2014년 中 정부 재정예산안

구분	2013년		2014년	
	목표 (억 위안)	실제 (억 위안)	목표 (억 위안)	증가율(YoY,%)
재정 수입 :	126,630	129,143	139,530	8.0
중앙	60,060	60,174	64,380	7.0
지방	66,570	68,969	75,150	9.0
재정 지출 :	139,630	139,744	153,037	9.5
중앙	69,560	68,509	74,880	9.3
지방	117,543	119,273	130,031	9.0
GDP 대비 재정적자(%)	2.0	2.0	2.1	0.1
사회보장제도 및 취업	6,551	6,572	7,153	8.8
의료 위생	2,603	2,588	3,038	17.4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업무	2,101	1,804	2,109	16.9
농림수산업 관련 업무	6,196	6,005	6,487	8.0
교육	4,132	3,884	4,134	6.4
보장성주책 지출	2,230	2,321	2,529	9.0
일반 공공 서비스	1,351	1,382	1,245	-9.9
과학기술 지출	2,530	2,461	2,674	8.7
문화교육 및 매스미디어 관련 지출	541	532	512	-3.8
교통운수 지출	2,974	4,346	4,139	-4.8
국방 지출	7,202	7,202	8,082	12.2
공공안전 지출	2,029	1,934	2,051	6.0
식량물자 구축	-	1,266	1,394	10.1

자료 : 정부예산보고, Shanxi Securities Co., LTD 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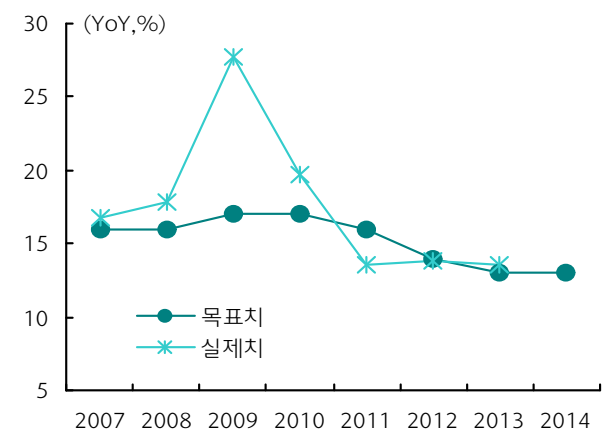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폭이 증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 2014년 재정적자 예산은 1.35조 위안으로 전년의 1.2조 위안보다 확대되었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 수준에서 유지 ('13년 2.0% → '14년 2.1%)
- 또한 안정적인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신용공급 및 시중 유동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다만, 총통화 증가율(M2)은 금융 디레버리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3년 13.6% 보다 낮은 13.0%로 제시
 - 2008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M2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011년 이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어 이후 유동성 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취업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발전, 거주민 소득 확대, 생태 환경 보호 지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할 계획
 - 2014년 정부 책정 예산 중 의료 및 위생, 환경보호 등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반 공공서비스와 교통·운수 등에 대한 예산은 축소

그림2 | 재정적자 규모 추이



자료 : CEIC

그림3 | M2 증가율 목표치와 실제치 추이



자료 : Wind, CEIC

2. 9대 중점 추진 과제

■ 정부공작보고에서 "개혁(改革)"이 77차례 언급되는 등 올해 전방위적인 부문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용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통해 민생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

- 2014년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행정, 재정, 세수 부문을 포함하여 금융시장, 국유기업 개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을 강조
 - 2013년에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촉진, 농업 및 도농간의 통합 발전, 민생보장, 개혁개방 심화 등을 4대 중점업무로 설정

표3 | 2013과 2014년 양회 중점업무 비교

2014년 정부공작보고 중점 업무			2013년 전인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 중점업무		정책 연속성
	중점 업무	주요 내용	중점 업무	주요 내용	
개혁	개혁 심화	- 투자 심의제도 개혁 - 재정 세수 개혁 - 금융체제 개혁 - 소유제 경영 강화	개혁·개방 심화	- 국유기업 개혁 추진 - 가격개혁 시행 - 재정 및 조세제도, 금융시장 개혁	◎
	농업 현대화 및 개혁	- 농업은 내수구조조정의 중요 영역임을 강조 -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 향상 - 농촌의 수력·통신 등 인프라 설비 개선	삼농(三農) 시행	-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 농가소득 증대 촉진 - 농민보조금 지급 규모와 범위 확대	◎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 과학시스템 개혁 - 과학기술인들의 창업 지원 - 신흥산업 발전 및 과잉생산 억제	산업구조 고도화 가속	- 과잉설비 해소 -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
내수 강화	내수경제 강화	- 소비촉진 정책 마련 - IT 소비 추진 - 투자 주체의 다원화 - 보장성주택, 농업, 수리사업 투자 확대	내수확대	- 중하위 계층 및 노동자, 농민들의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	◎
	신형 도시화 추진	- 도농간 일체화 시스템 마련 - 호구 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	- 도시화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호구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
민생 안정 · 환경 보호	민생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정책 추진 - 소득분배구조 개선, 저소득층 소득 향상 - 도농간의 단일화된 양로보험 구축 - 보장성 주택 700만채 신규착공	민생보장 및 개선	-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 보장성주택 건설 확대 - 부동산시장 규제 - 교육제도 개선	◎
	교육, 위생, 문화산업 발전	- (교육) : 중서부 및 농촌지역 교육 투자 확대 - (의료) : 도농간 의료보험제도 통합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서부대개발 촉진, 동북지역 낙후지역 개발 - 중부 발전 추진 - 빈곤 지역 발전 추진	◎
	생태, 문화, 환경보호	-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실시	자원절약 및 친환경사회 건설 촉진	- 에너지 소비 억제 - 환경보호 관련 정책 강화 - 생태 환경 보호 강화	◎
대외 개방	대외개방 수준 제고	- 서비스업 개방 - 통관제도 간소화 - 다국적 전자상거래 시범 지역 확대 - 상해 자유무역지구 시범구역 관리 강화	물가안정	- 안정적인 시장 공급 보장 - 유동비용 절감 - 가격변화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주 : 정책이 강조된 업무는 ◎, 새롭게 강조한 업무는 ●

자료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Shanxi Securities Co., LTD,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자료 재인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양회 폐막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개혁 초안 보고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중점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동시에 정부의 경비 축소 및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고용보장,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생보장을 강화할 전망
 - 특히 GDP 성장률을 7.5% 유지하는 취업 보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농촌경제 성장 및 토지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태환경 보호 등의 정책도 강화할 예정
- 2014년 중점 과제는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정책내용이 구체화·세분화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양로보험 도입 등을 통한 민생 안정이 더욱 강조

가. 개혁 심화

■ 투자 심의를 간소화하는 행정 체제 개혁과 삼공경비 예산의 공개 및 축소, 증치세 시범 분야 확대 등의 세제개혁을 추진

- (행정 체제 개혁) 올해 안에 200개 이상의 심사 항목을 폐지하는 등 투자 심의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관성 있게 진행
- (세제 개혁) 삼공경비(三公: 공무해외출장비, 공무접대비, 공무용차량 구매 유지비) 등 정부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축소와 세수제도 개혁을 추진
 - 증치세(부가가치세)의 시범적인 부과 분야를 철도 및 운송, 우정서비스, 통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소비세 및 자원세 부문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부동산세 및 환경보호세를 입법화
 - 소형기업들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 (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수상 모순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부채의 예산관리, 종합적인 재무 보고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리스크를 완화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수 배분과 재정지출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세의 분배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임

■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등을 통한 시장화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中 정부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1~2년 내에 예금금리자유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금융기관의 금리 결정권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위안화 환율 안정 및 변동폭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등을 유도해 금융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할 예정
 -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시장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3월 17일부터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

- 또한 주식 발행 등록 시스템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한편 보험 분야에서는 농업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특히 중국 내 인터넷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감독 체제를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지속

■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민간자본의 공공분야 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

- 국유기업은 민영화와 시장화 개혁의 첫 타겟으로 민간자본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유기업 경영자의 성과급 도입을 통한 급여 체제를 개선
- 민간자본 유치 등 혼합소유제를 통해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비국유자본이 금융 및 석유, 전력, 철로, 통신 및 자원개발, 공공사업 등의 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
 - 더 많은 분야에서 경쟁성 업무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

표4 | 2014년 전인대 기간 중 中 금융당국 기자회견 내용 정리

정부 인사	금융개혁 중 언급한 내용	추진 방향
조우샤우촨(周小川) (중인민은행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자유화 - 위안화 국제화 및 위안화 역외 시장 확대 - 中-EU 금융 합작, 홍콩과 대만의 위안화 업무 확대 -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내 예금금리시장 자유화 시행 - 위안화 국제화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개혁이 정착된 후 진행 - 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해 제반 여건 마련 - 위안/미 달러 환율폭 변동은 중기적인 추세를 중시하고, 시장 역할을 중시 - 홍콩의 위안화 업무, off-shore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리강(易綱) (중인민은행 부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관리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관리제도의 5가지 전환 : 허가에서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 사전감독에서 사후관리로 전환, 업무중심 관리를 수행 주체 중심의 관리로 전환, 무죄추정 원칙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샹푸린(尚福林) (중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은행 설립 - 소기업과 삼농대출의 자금 조달 어려움 - 과잉산업과 은행 부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은행 설립 촉진 - 소기업 정보 플랫폼 제공, 정부와 민간자본의 담보기구 설립을 유도해 소기업대출 담보 문제를 해결 - 삼농대출 서비스 확대 - 과잉산업에 대한 대출 엄격하게 제어하는 등 은행 리스크 관리 지속
샤오강(肖钢) (중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개혁 및 대외개방 - 주식시장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 - QFII, RQFII 의 투자 확대 및 중국 증권회사와 펀드 회사 등의 세계화 추진
샹진보(项俊波) (중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보험제도 및 농업보험 발전 등의 규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 - 농업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적극적인 농업보험 제도 시행

자료 : Shanxi Securities Co., LTD 자료 재인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농업 현대화 및 과잉산업 정리 등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유도

- 농업은 내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의 현대화 추진을 통해 종합적인 생산 능력을 제고
 - 농산물 목표 가격제 도입으로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농민에게, 높을 경우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중앙정부 예산 중 700억 위안을 수리시설에 투자하는 한편 농촌수력 및 통신 등 인프라 설비 개선, 농촌 지역 20만 km 고속도로 재건, 6,000만 농촌 인구의 식수 안전 문제 등을 추진
- 동시에 중국 정부는 과학혁신 가속화, 과잉산업 정리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 기초연구, 프론티어, 기술 개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창업을 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신에너지, 신소재 등의 미래형 산업 발전을 촉진
 - 반면 철강 2,700만 톤, 시멘트 4,200만 톤, 평면유리 3,500만 TEU를 감축하는 등 과잉산업 분야의 생산규모 감량을 실시함으로써 과잉생산을 억제

나. 내수 위주의 성장 가속화

■ 다양한 소비진작 방안 마련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성장 동력을 강화

- (소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능력을 제고시키고, 소비촉진 정책 등으로 내수 중심의 구조 전환 노력을 가속화
 - IT 발전을 통해 전자상거래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유통시스템을 개혁하여 비용을 절감
- (투자) 투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투자 주체 다원화 및 민간투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시행함에 따라 성장 기반을 강화
 - 중앙정부 예산 중 보장성 주택건설, 농업, 수리사업, 중서부 지역의 철도사업,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등에 약 4,576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새로운 경제권 구축) 장강삼각주의 경제 일체화, 환발해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간의 경제권 협력을 확대

■ 도-농간의 일체화 시스템 구축, 호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적 기반의 신형도시화를 적극 추진

- 도시와 농촌간의 이원화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일체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인적 중심의 도시화 정책을 가속화
 - 1억 명의 농촌인구 도시 이주, 1억 명 도시 빈민촌 주민의 주택 개조, 1억 명 규모의 중서부 지

역 도시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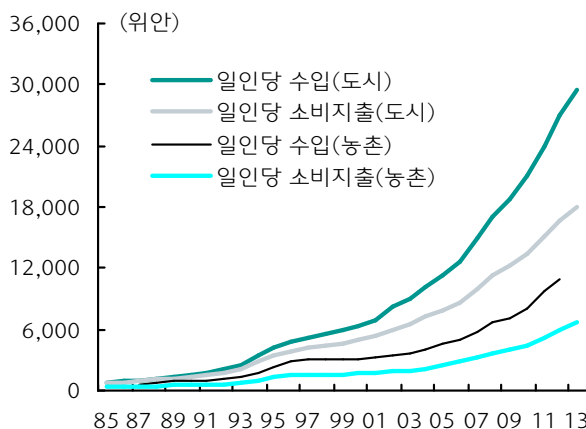
-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이후 도시화를 급상승 : 46.6%('09년)→52.3(12년)
-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 거주를 희망하는 농민에게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민 자녀에게도 정규교육 및 입학 기회를 제공
- 특히 중서부지역의 신형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교통 및 수리, 에너지, 인프라시설 마련 등을 가속화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

다. 민생보장 및 환경보호

■ 민생 안정을 위해 취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 보장성 주택 건설 등을 통해 민생 개선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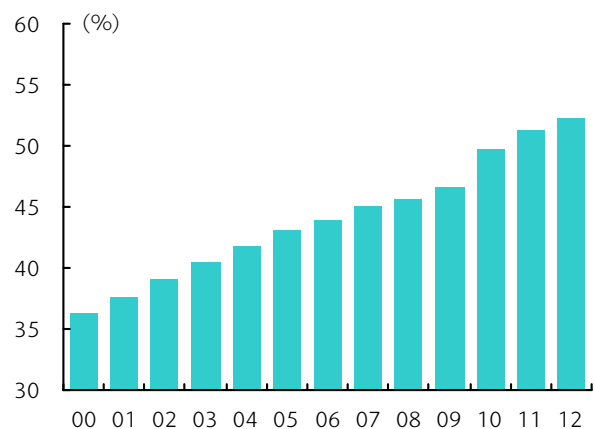
- 민생 안정을 위해 취업을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 졸업생의 창업을 지원
- 또한 기업 내 임금협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및 중산층 비중 확대 등의 소득분배 구조 개선 노력을 확대
-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2014년 700만 채 이상의 보장성 주택을 착공하는 등 민생 보장 차원에서의 업무가 가속화
 - 도시와 농촌간의 단일화된 양로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마련
 - 2014년 700만 채의 보장성 주택을 신규 착공할 계획으로 그 중 470만 채는 빈민 지역에 건설

그림4 | 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소득 및 소비 지출 추이



자료 : CEIC

그림5 | 중국 도시화율 수준 제고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 의료, 문화 부문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우려 중대로 환경 보호 관련 강력한 조치를 실시

- 중서부 및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제도 통합 및 정부-기업-개인의 합리적인 의료보험금 분담 제도를 마련
 - 농촌 지역의 빈민 학생 고등 교육 진학률을 현 수준보다 10% 이상 확대할 계획
 - 기본 의료 보장 기준을 1인당 연간 280위안에서 32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위생 지출 비용도 30위안에서 35위안으로 상향 조정
- 최근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이 마련
 -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등의 개발이 강화되고 수돗물과 가스 이용에 대해 누진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라. 대외개방 수준 제고

■ 대외개방으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

- 2014년 수출입 총액 증가율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통관제도 간소화 및 다국적 전자상거래 시범 지역 확대를 추진
- 또한 가공무역 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판매망 구축 지원, 서비스 무역과 아웃소싱 등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 지위를 제고
- 중국 내륙 및 연안 지역의 개방을 확대하고 상해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본 유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해 현지기업과 외국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표5 | 상해자유무역지구의 금융정책 방향 예상

영역	내용
금리	- 금리자유화 전면 시행: 예금금리 자유화
외화	- 위안화 자본거래 개방과 위안화 결제 우선 추진; 개방된 외화관리시스템 구축
은행업	- 외국계은행 자회사 설립과 합자은행 설립은 기존의 요건과 절차 등 제한 폐지, 역내 외자은행들이 모든 업무 취급 가능, 일부 중국계은행은 역외업무 취급 허용
금융결제	- 외국인의 결제기관 설립 허용
리스	- 리스회사에 대한 세제우대
선물시장	- 외국기업의 상품선물시장에서 거래 허용

자료 : 일간지

표6 | 추가개방 가능 산업

산업	현재 개방 상태	FTZ 정책
선박해운	합자만 진출 가능	자유화원칙 적용
정보조사	통제(restricted)	
연출중개	통제(restricted)	
오락장소	통제(restricted)	
교육연수	대학: 장려, 합자만 허용 고등학교: 통제, 합작만 허용 의무교육: 금지	부분 개방
문화용품 거래 및 경매	금지(prohibited)	
통신부가서비스	통신사 외국지분 50% 미만	부분 개방

자료 : 일간지

Ⅲ. 평가 및 시사점

1. 정책 평가

- **(개혁)** 본격적인 개혁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중국 정부는 2014년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기능을 간소화하는 대신 시장의 역할과 민간자본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국유경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제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쟁 환경 악화를 초래
 - 수입배분 체제 개혁과 중산층 비중 및 거주민 소득 확대, 유통시스템 개혁 등은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
 - 다만 리커노믹스 추진 지속 및 구조조정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디레버리징 추진 과정에서 과잉생산 억제, 지방정부채무 해소 등으로 투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공경비 축소 등 반부패 정책이 강화될 경우 소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예금금리 자유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현재 예금금리 상한선(기준금리의 1.1배)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책 당국은 1~2년 내 예금금리자유화 시행 계획을 언급

표7 | 2014년 양회 정책 평가

주요 정책	평가 내용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구조조정 확대 등은 단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약화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예금금리 자유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내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자녀” 정책 완화를 통한 육아용품,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소비 시장의 확대 - 신형도시화, 농민공의 소득 개선, 호적제도 개선 등을 통한 소비 창출효과 기대
민생 개선 및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및 확장 재정정책 지속으로 생활 환경 개선 - 스모그 퇴치,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적 성장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
대외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의 개방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대 - 상해무역지구의 활성화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 증대

- 금리자유화 개혁으로 그동안 금융자원 분배의 왜곡과 금융기관 및 통화정책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금리제약으로 저렴한 자금이 국가전략 산업과 국유기업 위주로 유입되면서 국유경제부문이 발전하는 반면 민간부문과 소비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 정부 당국은 이미 전인대 회의를 통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3월 17일부터 환율 일일 변동폭이 $\pm 1\%$ 에서 $\pm 2\%$ 로 확대 시행
-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투기성 자금의 해외 유입을 견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자유화와 국제화 기반을 마련
- 외환관리체제 변화를 통한 제도 개혁으로 투자와 대외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자본 시장의 심화로 적격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의 투자가 확대
 - 중국 주식 및 채권시장의 경우 QFII 자격을 갖춘 기관만 달러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2011년 RQFII 제도가 시행되면서 역외 위안화채권(딤섬본드)을 발행하여 본토 증시에 위안화로 투자 가능

■ (내수 확대)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및 신형도시화를 통해 내수 성장 방식 전환이 가속화

- 올해 소매판매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14.5%(YoY)로 설정함에 따라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기반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8기 3중 전회에서 언급한 "한 자녀" 정책 완화를 통해 베이비붐에 따른 육아용품, 식품, 교육, 의료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978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8년 부모가 다독자일 경우 5년 격차로 두 자녀 허용까지 완화하였으며,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완화
- 신형도시화 추진으로 농민공의 소득과 사회보장 등이 개선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한 농민의 도시유입 증가는 중국의 소비 제고에 기여
 - 호적제도 개혁으로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도시의 의료, 자녀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 생산효율성 제고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민생 개선 및 환경보호)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민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소수민족 갈등과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에 대응해 신규진입 노동력의 고용 확대 등 민생 안정을 보장
 - 특히 농촌경제 성장 및 토지제도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식품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 등도 민생보장 차원에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올해 재정적자 확대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 경감과 함께 민생보장을 위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
-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개혁을 통해 자원가격을 현실화하고 친환경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을 확대하면서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22.3%로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각각 3%, 2.9%로 낮출 계획

■ (대외 개방)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함께 상해무역지구의 서비스 개방도 점차 확대될 예정

- 개방 분야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에서 산업 고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선진 해외기법과 자본 유치 필요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
- 상해무역지구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외 개방 확대로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18기 3중 전회에서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 가속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아세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31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 한국과 호주 걸프협력이사회(GCC)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2.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성장전략을 동반하는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정부 당국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7.5%로 설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지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개혁 추진의 여건을 마련
 -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GDP 성장률 목표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경제성장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
-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주도와 소비중심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수입배분 체제 개혁과 중산층 비중 확대, 거주민 소득 확대 등 소비활성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등 성장전략을 동반하는 개혁 추진
 - 소매판매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무역규모 및 고정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은 정부의 성장기조 전환 노력에 부합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개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유동성 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 다만 개혁 및 리스크 관리가 강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성장 동력의 약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 다만 올해 경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자원의 부문 간 이전, M&A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1978년 시장화 개혁 추진 초기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인구가 크게 증가
- 개혁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의 파산 증가, 정책과정에서의 한계 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재현될 수 있음
 - 특히 리커노믹스 추진 지속 및 구조조정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삼공경비 축소 등의 반부패 정책 강화로 소비가 제한될 수 있음
 - 민영경제의 부상과 정부독점 분야의 개방 등은 새로운 동력 창출에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중국 정부가 부채와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디레버리징 과정에서의 신용경색 가능성도 예의 주시할 필요
 - 재정 및 세제개혁, 금융개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 등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나, 엄격한 부채관리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도 상존

하나 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if.re.kr>